제338회국회
(임시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월7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2.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3.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4.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

**심사된 안건**

1.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 2
   가. 외교부
   나. 통일부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6
2.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심재권·이종걸 의원 외 116인 발의) ····· 6
3.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원유철·심윤조 의원 외 154인 발의) ····· 6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3
4.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 ····· 23
1.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계속) ····· 24
   가. 외교부
   나. 통일부

(14시09분 개의)

**○위원장 나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2건의 북한 핵실험 규탄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안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은 1월 6일 수요일 수소탄 핵실험 강행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8·25 남북 공동합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남북관계를 또다시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금번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너무도 명백하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금번 도발 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재인식하고 핵물질과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의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유엔 결의안 채택에 의한 대북 제재 등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하며 보다 실효적인 제재 또는 제재 그 이상의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핵문제를 이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6자회담 당사국 틀 안에서 중국의 역할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바, 중국과의 보다 긴밀한 공조 또한 저희 외교당국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핵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할 것도 역시 주문합니다.

결국 이번 실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도하의,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에 의한 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이제 과거의 대응 수준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같이 지적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의 안주의 태도를 넘어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좀 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1.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14시13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매우 엄중한 도전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의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초기 대응과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관련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북한은 그간 북핵 불용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파를 즉각 감지한 데 이어서 곧바로 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CTBTO)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들과 사실확인 등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착수하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실시 직후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핵실험이 북측 발표대로 수소탄 실험인지 여부와 동 실험이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둔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CTB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어제 비엔나에 위치한 CTBTO 측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 브리핑에서 금번 핵실험은 지난 2013년 제3차 핵실험 당시 관측된 지진파 충격 등과 거의 동일한 특성이 관측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CTBTO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오늘 오후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2쪽에 있는 정부 대응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 지진파 탐지 후 즉각적으로 NSC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였으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금번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이러한 무모한 도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금번 정부 성명을 유엔 안보리 문서로 회람시켰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지진파 발생 직후 지체 없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주재국 차원의 규탄 성명이 나오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외국민 안전조치를 각별히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시대착오적 병진노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고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강력한 제재를 자초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어제 NSC 긴급회의 직후부터 미국·중국·일본 및 안보리 주요 이사국, 그리고 EU, 아세안,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금번 북한 핵실험 규탄과 강력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제재를 도출하기 위한 공조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어제 핵실험 직후 리퍼트 주한대사와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함께 초치하여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 케리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무엇보다도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면서도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어제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 협의를 갖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1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유선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중국 측 사정상 시간을 재조정 중에 있는데 그간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해 온 점에 기초하여 앞으로 안보리 차원에서의 조치에 있어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EU 고위대표,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1월 안보리 의장국 우루과이,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 스페인, 한·호주·인도네시아·멕시코·터키 등 지역별 핵심 중견국으로 구성된 MIKTA 의장국인 호주 외교장관 등 10여 개국 외교장관과 긴급 접촉을 통해서 북한 핵실험 규탄과 유엔 등 관련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측 요청에 따라 한국시각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어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만간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는 요지의 언론 성명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한 안보리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북 규탄성명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국제공조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미·중·러·영·불 등 P5를 포함하여 전 세계 30여 개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EU, NATO, IAEA 등 주요 국제기구 차원의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 및 입장 발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동북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는 물론 양자·다자 차원의 조치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며, 핵무기 추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임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금번 북한의 도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금번 사태를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보다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12월 28일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타결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위안부 문제가 부각된 이후 24년간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난제 중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박근혜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협상이 1년 8개월간 진행되어 왔는데 지난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후 2개월간 집중적인 협의 끝에 작년 말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풀어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요구와 바람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나름대로 잘 반영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보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 6쪽에 있는 합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합의는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도의적' 표현 등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표명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금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있었던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시에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거 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일본 정부 차원에서 10억 엔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운영할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책임 이행조치로서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이라는 3대 핵심요소는 과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식·비공식 추진된 그 어떠한 시도와 비교할 때도 확실히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많은 평가입니다. 또한 금번 합의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해 재단이라는 창의적 메커니즘을 마련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금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다수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는데, 이번에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주요 외국언론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백악관과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금번 합의 도달을 환영하면서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였는데 마침 오늘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미측의 환영과 지지 입장을 거듭 표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 백악관 고위관리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에 촉구해 왔다고 공식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마이크 혼다 미 하원의원 등과 같이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인사들도 금번 합의

를 긍정적으로 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밖에도 금번 합의의 성과와 의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와 언론의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며 상세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금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경우 한일 양국 관계를 위한 전기가 새로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렵게 이룬 합의가 잘 이행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동시에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상황과 정부의 조치 상황 그리고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 상황입니다.

북한은 어제 1월 6일 10시 30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1월 6일 북한 시각 10시에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후 정부가 취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후 정부는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비상대응태세를 가동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 주재로 두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 체류 국민 안전 등 제반 대책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북한 핵실험 비상상황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그리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체류 국민 신변 안전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현재 개성공단에 849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방북 예정 인원은 없습니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체류 인원 신변 안전 관리 지침을 하달하여 대북접촉을 자제하고 언행에 유의해 줄 것과 물품 반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페이지, 향후 대처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핵 불용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북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중대한 조치 도출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미·중·일·러 등 주요 국가와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리하고 체류 인원은 국민 안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민간 차원의 접촉·방북 등은 보류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태도, 남북관계,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일치된 입장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합심하여 만반의 대응태

세를 유지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31분)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들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아서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심재권·이종걸 의원 외 116인 발의)

**3.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원유철·심윤조 의원 외 154인 발의)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의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깊은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슬기로운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는 심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확고한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 실패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정부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윤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갑 출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오전 본 의원이 원유철 의원과 대표발의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어제 아침 10시 30분,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습니다.

북한의 금번 4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제209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입니다.

두 결의안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도발행위로서 규탄하고 있다는 점,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점, 대한민국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심재권·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 실패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점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결의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고 간사님들께서는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회의 중에 협의를 계속 하셔서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안 의결을 위해서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위원**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재오 위원** 지난번에 남북 간에 장관급 회의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차관급이었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때 6개 항을 합의한 게 있지

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6개 항이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지금 북한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북한의 핵실험은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와 생존 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대한……

**○이재오 위원** 비정상적인 상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재오 위원** 그때 합의한 3항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

그러니까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이 단서가 붙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재오 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의 4차 핵실험, 자기들이 말하는 수소탄 실험은 명백하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당시 8·25 합의의 3항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위기가 초래하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재오 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보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수소탄 실험보다 현재 더 중대한 우리 안보에 위기가 있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중대한 안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성기……

**○이재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핵실험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묻고자 부른 겁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재오 위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 성명의 요지인데, 상응하는 대가라고 하는 것이 동맹국과 6자회담 참가국,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조치, 이게 결국은 정부가 말하는 상응하는 대가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안보를 위협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상응한 대가 아주 확실히 하겠다' 이랬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나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간다 그러는데 이 모든 필요한 조치도 결국은 유엔에다가 이것을 넘기고 안보리에 넘기는 것 이외에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생각한 적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시게 되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주한미군 스캐퍼로티 사령관과도 긴밀히 협조를 했고요. 또 저희 차원에서도 리퍼트 대사, 스캐퍼로티 사령관을 동시에 불러 가지고 안보적인 측면과 외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를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전체 또 국제사회 전체가 이것은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재오 위원** 장관,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은 핵실험을 한 거예요. 직접적인 위협의 당사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제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뭐 긴 설명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묻는 요지는 그건 그대로 하는데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여기에 상응한 대가가 뭔가를 제시한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리 안보 당국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검토하고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지난번에 일본 외교장관과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 있지요, 남북문제에 대해서 한일 외교장관 공동합의문.

거기에 보면 한국 정부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밝힌 것 중에 1, 2, 3항이 있는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어입니다.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맞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러면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지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인지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정부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사실로서 한국 정부도 듣고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이재오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재오 위원** 한국 정부가 인지한다는 것이지요,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다음, '관련 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관련 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일본 정부예요, 한국 정부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주어가 한국 정부입니다.

**○이재오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재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라는 것이 빠졌는데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 표현은 이면을 뒤집으면 일본으로서는 '소녀상 이전을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라고 충분히 왜곡 보도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1월 4일 날 기시다 외상 스스로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고 또 누차……

**○이재오 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데 이미 다 봤고 문맥을 보잔 말이에요, 이 합의문 문맥을.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 말은 일본 정부로서는 '소녀상 이전을 한국 정부가 내용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왜곡 선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곡 선전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정부라도 우리가 거꾸로 일본의 입장에 섰다면 얼마든지 이 합의문 하나 갖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은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추가 협상을 할 때 분명히 이 앞에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 문구는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것은 소녀상 이전밖에 더 있어요? 일본이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번 회담이 굴욕적으로 협상을 했고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기로 했다는 일본의 역선전에 우리가 말려든다 이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이걸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빌려서 분명히 해명을 했고 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을 기시다 대신을 포함해서 여러 레벨에서 벌써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오 위원** 장관, 일본 정부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는 거예요. 합의에 양국 당사 간의 합의는 각국이 자기네들의 자국의 이해에 맞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이 문구는 일본으로서는 '소녀상 이전을 한국 정부가 합의했고 그 대가로 자기네들이 10억 엔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일본이 선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이 문구 이대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협상을 하든지 정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저와 저희 당의 의지가 전부 밝혀져 있습니다. 거듭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가 단호하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3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대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북핵문제의 대응으로 4차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취해왔던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패가 없도록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소위 말하는 다종화 또 전달체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만 허용하는 이런 대응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일 외상 합의에서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 합의를 잘 보시게 되면 이것은……

**○심재권 위원** 장관님 정확하게, 제가 다음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고노 담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시켰고요. 고노 담화에 추가해서 이 합의에는 책임 인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 통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잠깐이요, 그 부분이 강제성 인정이 어느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 합의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의 토대하에서……

**○심재권 위원** 고노 담화 계승이 어디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고노 담화 계승이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계기에 밝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심재권 위원** 장관!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심재권 위원**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발표한 어떤 구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참 엄청난 돈 벌어오셨습니다. 10억 엔 받았는데 그게 배상금입니까? 그 성격이 뭡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출자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리를 아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대가인지.

**○심재권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니, 이건 위로금이잖아'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은 법리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장관,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배상금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혀드린 것처럼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처치유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렇게 호도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법적 성격을 밝혀 주십시오. 배상금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에 아시아여성기금일 때에는 분명히 민간기금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재권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면 그것은 배상금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세 가지 요소를 다 합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어제도 우리 국립외교원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해석들을 잘 경청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심재권 위원** 장관님, 그렇게 해서 또 국민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기시다 일본 외상은 명백히 '배상금이 아니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앞뒤를 살펴보고 국립외교연구원에서 토론을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세 가지 요소는 과거에 아베 정부에서는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굉장히 진일보한 이런 사안입니다.

**○심재권 위원** 진일보해도 좋고 진이보해도 좋고, 어쨌든 배상금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세 가지를 다 보시고 특히 정부 출연으로 한 정부자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심재권 위원** 그런 추잡한 소리 하지 말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과거 정부들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받아낸 겁니다.

**○심재권 위원** 정부에서 내는 출연금들 많지요, 문제는 어떤 명목으로 출연하느냐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괄 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과거의 여성기금은……

**○심재권 위원** 또 호도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권 위원**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배상금 아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장관 혼자서 배상금이라고 우겨댑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세 가지를 다 합쳐 보시고 정부 출연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답이 됩니다.

**○심재권 위원** 조금 전에 이재오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녀상 이전, 장관께서 장관 입으로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걸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동의했다라고 보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 누가 있어요? 왜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또 속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양국 외상이 그것도 상대방 기시다 외상이……

**○심재권 위원** 조금 전에 이재오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답변했지요? 1월 4일 기시다 외상 이야기를 보라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1월 4일 날 기시다 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녀상 이전 한국 정부가 해 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합의된 문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일본……

**○심재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관께서 1월 4일 기시다 외상 운운하길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항목도 또 문제입니다. 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래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우리 위안부 문제 등재하는 것 한국이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세 가지 핵심요소를 다 이행한다는 전제로 정부 차원에서는 상호 비난·비판을 하지 않는다, 자제한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상호 자제,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심재권 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심재권 위원** 장관, 그런 추잡한 소리 말아요! 나라의 혼을 그 정도 팔았으면 됐지 지금도 그따위로 국민을 호도하려 합니까?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민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게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한·일……

**○심재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외상은 1월 4일 날,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선호하시는 1월 4일 발언에서도 '유네스코 문제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장관, 어떻게 우리 혼을 팔았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겼으면 이따위 소리가 나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지금 관련 단체에서……

**○심재권 위원** 그게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답변입니까?

지난번에 홋카이도 등 일본 전쟁유산들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할 때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회가 어떻게 했어요? 전부 함께 나서서 힘 모아서 조금이라도 저지해 보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뭐예요? 민간이 하는 문제라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장관, 정말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 합의에서 이룬 3대 핵심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4년 만에……

**○심재권 위원** 종이가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지난 2,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심재권 위원** 그동안 24년 동안에 이렇게 나라 팔아먹으려면 누가 못 팔아먹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정기를 찾아보려고 했으니까 24년간 버텨 왔지요. 차라리 그냥 남겨 둬야지요. 어떻게 그걸 뻔뻔하게 팔아넘겨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년 만에 해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어느 정부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양심세력과 공조를 해서 지난 2, 3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바로 그러한 결과로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안을 내게 됐고 최종으로 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저희의 집요한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심재권 위원** 장관, 이번에 이루어진 그런 합의라면 누구나 다할 수 있어요, 그런 합의라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거지입니까? 10억 엔 받고 위안부 넋을 팔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정부 스스로가 수없이 밝혔습니다, 그러한 전제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재권 위원** 일본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금이에요!

**○위원장 나경원** 질의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심재권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심윤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윤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심윤조 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의제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이고 저희가 오늘 중에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질의 내용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것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의제를 가지고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좀 더 여야 간에 의견 조정을 빨리 해서 의결정족수가 가능한 시점에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노력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심재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재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심재권 위원** 지난 28일 소위 한·일 외상 합의를 보고 즉각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누리당에 의해서. 그래서 어제 북한 핵실험이 문제되고 그러면서 '의제에 이것도 함께하자, 안건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굳이 안 넣더라도 현안보고 받고 거기에 질의에 함께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북한 핵실험 문제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안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러면 무엇무엇 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가 10분을 조금 넘겼습니다마는 그건 유감스럽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갖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식으로 적절히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안에 적절히 질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어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따른 북한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관한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된 의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북한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수소탄 실험 성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수소탄인지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4차 핵실험으로 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측은 자기네들이 '수소탄 또 시험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정황이나 규모 등 측정된 것을 봤을 때 수소탄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수소탄인지, 그것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수소탄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4차 핵실험, 그러니까 2013년 3차 핵실험에 이은 4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수소탄도 크게 봐서는 핵무기라는 차원에서……

**○이주영 위원** 수소탄도 핵무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주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앞서 3차 핵실험 직후에 2094호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고 거기에는 트리거(trigger) 조항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다음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회의 소집을 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회의가 소집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그게 수소탄 실험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094를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WMD를 커버하는……

**○이주영 위원** 그러면 북한이 그걸 굳이 4차 핵실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소탄 실험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지금 수소탄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수정으로 비유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주 초보 단계의 수소탄 실험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도 있는데, 수소탄이라고 하더라도 트리거 조항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늘 바로 안보리 회의 끝나고 안보리 의장이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각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협의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전제가 그러한 핵실험했다는 전제 하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통일부장관께…… 두 분 다 NSC 구성 멤버니까 그런데 정부 대응조치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민한 대응, 두 번째 강력한 대응, 세 번째 포괄적 대응입니다.

어제 10시 30분에—지금 다 우리 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핵실험이 있었고 우리 남측 기상청에 의해서 다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진으로 발표도 됐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에 중대보도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12시 30분에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하에, 거기도 NSC 유사기구가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주영 위원** 외교부장관이 답변하셔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시 40분에 회의가 소집돼 가지고 여러 정보에 대한 분석, 그때는 중대보도에 대한 예고만 된 상황이고 지진파 정도 감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12시 30분에 북한 조선중앙TV의 발표가 있고 난 1시간 뒤인 1시 30분에 NSC 회의가 열렸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니, 그건 오해십니다.

**○이주영 위원** 잘못됐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두 가지로 저희가 회의를 나눠서 했는데요. 일단 12시에 먼저 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를 열고요, 그 결과로서 정부 성명을 내고 이어서……

**○이주영 위원** 대통령 주재 회의를 1시 반에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1시 반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했고요. 또 해당되는 부서들은 이미, 벌써 10시 30분에 한 직후에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즉각적인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가 일본 정부에 비해서 다소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여쭤 본 거예요. 좀 늦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부서는 즉각적으로 가동체제를 취하고 그러면서 이미 즉각적으로 NSC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다 매뉴얼에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3차 회의나 과거에 핵실험이 있을 때 시간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번 회의 소집이 가장 빠른 측면에 속한다고 아실 수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좋습니다.

다시 통일부장관께 여쭙니다.

수소탄 실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작년 12월 10일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는 중에 '자신들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사실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보유'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핵폭탄, 수소폭탄의 굉음이 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유를 전제로 한 표현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을 암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사 발언이 아니라고 우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한 20일 뒤에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는 북한이 '8·25 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여러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 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주영 위원** 그러면 앞에서 12월 10일에 수소폭탄 보유를 추정할 수 있는 언급, 신년사에서는 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남북관계 개선' 이걸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했는지, 그 판단들이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어떤 임박 징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은밀하게 실험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월 10일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주목을 했고, 다만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북한의 기술력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이것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판단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신년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냈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번 신년사에는 북한이 5월 당대회 등 내부 입장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만큼 거기에 맞게 실제 행동을 보여라라고 일단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핵·경제를 병진시켜 가는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4차 핵실험, 수소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핵과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부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병진노선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영 위원** 북한은 8·25 합의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에다가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처럼 해 오면서 남북 고위급회담, 차관급회담을 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를 집요하게 했었고요. 또 북한의 여러 지역에 있는 경제개발특구의 투자유치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북한이 8·25 합의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8·25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고 또 실제로 금강산관광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항상 신중하게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 왔고, 지난 1차 당국간회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금강산 재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따져 가면서 합의를 하고 또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주영 위원** 핵개발을, 수소탄 개발을 그렇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핵·경제 병진 이렇게 내세우면서 남쪽에다가 금강산관광 재개 또 경제특구의 투자유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위장이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위장이라고 보고요, 기만전술이었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항상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서 북한의 어떤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예정

입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경원**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1·2·3차에 이어서 4차 핵실험, 소위 말하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1차 때도 2차 때도 3차 때도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과 함께 우리나라가 강력한 제재를 취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거나 제재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마이웨이로 내 갈 길 계속 가고 있다 하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상응한 대가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북한이 취한 조치가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병국 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기존의 제재보다 더 강화된 제재가 나올 수 있고요.

**○정병국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1차·2차·3차 때도 계속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했다라고 하면 제재를 받는 당사자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향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북한은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상응한 대가로 지난 8·25 합의에서의 우리가 결의를 했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에 상응한 대가로 우리가 북한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픈 것이 대북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재개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확성기 재개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확성기 재개를 위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도발은 전략적 도발이고 또 국제적인 제재와 함께 대응을 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재개 시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병국 위원** 장관, 그동안 실질적인 제재를 해 왔잖아요. 계속 제가 '1·2·3차 제재조치가 효과가 있는 거냐?'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이 제재조치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4차 실험을 못 해야지요, 두려워서라도. 아랑곳없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님, 지금 중국 측하고는 어떻게 접촉을 해 봤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 측은 제가 원래 조금 전 1시에 통화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생겨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정병국 위원** 아직 대화는 못 해 봤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른 여러 채널로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고 이미 어제 중국 측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명이 된 것 같고요.

**○정병국 위원** 발표된 건 봤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또 왕이 부장 스스로가 어제 저녁에 북한 대사까지 참석한 외교단 리셉션에서 강한 언급을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닌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최소한 사전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

니다마는……

**○정병국 위원**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지난 모란봉악단 철수 이후에 양측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정병국 위원** 저는 그렇게 표면적,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NSC 회의 하면서 몇 가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 저는 북한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일련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중국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혹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엔 결의, 국제적 제재 이런 것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북한 간에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철저한 단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앞으로 중·북 관계는 이번…… 과거 3차 핵실험 이후에 북·중 관계가 3년 동안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중국 지도부에서 시 주석을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4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생각은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엄격히 얘기하자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는 안 갖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물론이지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인데,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대응이라든가 그동안의 대응을 보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하면서 다만 이게 확산이 되지 않으면 된다 하는 입장인 것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늘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께서 통화하실 때도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보게 되면 '핵 확산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분명한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한 시각이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 뚜렷한 직접적 제재가 과거만큼 강하지 않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양자적인 제재도 상당히 강한 수준에 있고요, 앞으로도 또 아마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도 또 추가적인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한미 간을 포함해서 이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또 비상임이사국과 함께 저희 안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병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추가적 제재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금융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같은 경우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마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정병국 위원** 이 두 가지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각국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통일부장관님, 지금 현재 8·25 합의에 의하면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미 취한 조치를 하면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민간 차원의 접촉, 방북 등은 보류를 다 시켜 놨어요. 그러면 8·25 합의를 깬 거잖아요, 이것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8·25 합의를 깬 것은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 깬 거지요. 왜 깬 것이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지금 8·25 합의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정병국 위원** 8·25 합의에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하나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민간교류 활성화인데 지금……

**○정병국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8·25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디까지를 깬 거냐, 안 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의 징후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도 무디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사전 통보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지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핵이 존재하게 되면 당사국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제3세계국이고.

이런 식의 정부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 그랬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도 인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도 이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건지 그 이후에, 실험을 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나경원**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번에도 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영우 위원** 알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영우 위원** 얼마 들어갔다고 무슨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인데, 국방부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번에 3차 핵실험 때—2013년이지요—이 때 들어간 비용이 핵시설 건설하는 데 한 7억 달러, 또 우라늄 개발하는 데 한 4억 달러 등등 해 가지고 최대 한 15억 달러, 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경제 파탄의 상황에서 핵실험 할 때마다 이렇게 2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2조 원이면 북한 주민 전체가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정권이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서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도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반인권·반인륜적인 도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북한이 걸핏하면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민족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우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북제재 결의나 추가적인 제재, 내용이 뭐가 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북제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험, 핵 도발이 반인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회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은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는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북한의 핵실험 이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법이라도 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북한에 대한, 주민이 아니고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동의합니다.

**○김영우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간에 빨리 합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달 12월 2일이지요, 지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어요. 정기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법…… 또 게다가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자칫 테러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테러이지요. 그런 면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를 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문, 지난번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또 많은 국민들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0억 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베 정부로부터 사죄 또 책임 이런 직접적인 사과를 얻어 낸 것은 저는 그래도 외교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어떠한 외교적인 합의를 해도 이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100% 위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더욱더 마음으로 다가가서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제1차관이 그냥 딱 한 번 찾아가고 그다음에는 뭐가 없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한 해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한 15회 정도의 접촉, 면담,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 단체나 관련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또 여가부도 나름대로 TF를 만들어서 회의를 많이 했고……

**○김영우 위원** 글쎄요, 무슨 회의 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또 저도 작년의 경우, 2014년의 경우 직접 나눔의 집과 쉼터를 찾아가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도 제가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입장은 공개적으로건 비공개적으로건 저희한테 전해진 그런 것을 대체로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김영우 위원**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 충분히 접촉하시고 충분한 위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후속 조치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 또 관련된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상처의 치유에 필요한 모든 노력은 다할 겁니다.

**○김영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여러 차례 만났다' 이렇게 장관께서는 얘기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저는 만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자 마자 그냥 덜렁 차관 한 사람 가 가지고 할머니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전혀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는 더욱더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저희가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갈 것입니다.

**○김영우 위원** 이것은 단순히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 또 합의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이야 외교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할머니들에 대한 위로, 또 이해를 구하는 일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는 항상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위원** 김한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남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배신이자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한길 위원**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이재오 위원님과 정병국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북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장관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외교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무래도 외교부는 대외관계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요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히 한미 공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중심으로 하고요.

**○김한길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장관은 할 일이 그거다……

통일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할 것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은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응조치는 또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아까 또 몇 분이 말씀했는데 확성기방송 재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지금 국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길 위원** 김대중 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햇볕정책의 최우선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불용을 대북정책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튼튼한 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해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안보 위기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 현실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만 쳐다보고 있은 결과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또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 조성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한길 위원** 장관님,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는데 구호로서 말하는 신뢰프로세스,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사실상 북핵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는 데 불과한 정책,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에 대한 제재와 봉쇄로 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기회와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이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강경한, 강력한 비판성명을 낸 것에서 보듯이 국제사회 누구도 이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난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벌써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한길 위원** 그래요?

튼튼한 안보와 북핵 불용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미국과 중국 등 우방들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장관께 묻겠는데요.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은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득을 안겨다 줄 거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제적으로는 이미 ‘통일 대박’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물론 북핵 실험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김한길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유효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나 그런 통일……

**○김한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통일은 과정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평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돈과 또 다른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부장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과정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밑받침되는 거고요. 그것은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중요시한 이유가 바로 신뢰가 있어야지 지속가능한 평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란 인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한길 위원** 지금은 공허한 통일구호 대신에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핵문제가 다시 돌출하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제대로 담보하지 않고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없잖아요. 평화가 담보되어야 대화도 더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국제사회에 북에 대한 입장들을 요구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저 핵문제는 국제사회에다 맡겨 놓고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북하고 평화가 실천되고 대화가 더 활성화되면 당신들이 핵을 포기할 때 국제사회에서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북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이렇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요 북의 핵문제를 우리처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너무나 등한시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 소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실천한 게 있고 노력한 게 있어요? 그저 5·24 제재, 유엔에서의 제재에 대한 실천이라고 해서 봉쇄에 동참한 것…… 봉쇄되지도 않지요. 그다음에 어떤 진지한 대화 노력을 기울여봤습니까?

그런 면에서 통일부나 외교부가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저는 통일부가 통일에 대한 입장도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외교부 역시 북핵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문제다 하는 입장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교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까지도 저희는 북핵문제를 무엇보다 당사자로서 우리의 문제라는 입장을 전제하에 국제사회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입장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것입니다.

**○김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외교장관께 하나만 여쭐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옮기려고 시도할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한길 위원**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합의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한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치우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문자 그대로, 합의된 그대로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한길 위원**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쉽게 말하는데 쉽게 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로서는 일본 측이 이것을, 우리가 표명한 것을 인지했다는 그 자체……

**○김한길 위원** 자꾸 어렵게 말씀하지 말라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 들으니까 결국은 10억 엔 받고 어떻게 소녀상 치우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측이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김한길 위원** 그런 시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일본 측이 그런 전제가 아니라는 걸 부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한길 위원** 소녀상에 대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없습니다.

**○김한길 위원**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한길 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김한길 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건 민간 주도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일본 측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인지했다는 말을 쓴 것도 그런 토대 위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김한길 위원** 나는 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 들으면요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항상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간단하게 답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말씀하는 것 들으니까 철거를 시도하겠구먼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경원** 김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위원** 이번에 핵실험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그 사이, 90년대 초, 20년이 넘는 사반세기 동안에 걸친 북한 핵문제가 여러 가지 점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1·2·3차하고는 다르게 정보의 실패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인텔리전스(intelligence)는 물론이고 첩보, 인포메이션(information)에서도 아무런 징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군사적으로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개 한 달 정도의 징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걸 갖지 못하고 결국은 어제 10시 반 그리고 발표를 한 12시 반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아주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교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 통일부장관께서 설명한 대로 일단 북한이 언제든지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대비가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번의 경우는 은밀하게 준비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미·중·러시아 모두, 주변국들도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물론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이 문제는 외교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강화하기 위한 군사외교 그리고 외교상의 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조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당연히 앞으로 외교부도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동향에 사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에는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생각입니다.

**○신경민 위원** 군사와 외교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인데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붙박이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에서도 못 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킬 체인(Kill Chain)이랄지 KAMD라 할지 또 이동식발사체를 이용한 모든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첩보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번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아주 뼈아픈 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못 해도 우리나라는 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못 해도 이스라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전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못 한 것이다라는 태도와 세계 어느 나라는 못 해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태도에, 180도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로 군사적인 거기는 합니다마는 외교를 맡은 외교장관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참고로 바로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작년에 CTBTO(핵실험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을 초청 방한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력에 관한 합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TBTO가 저희한테 계속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시 반에 일단 인공지진이 났고 12시 반에 북한이 공식으로 할 때까지 2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인공지진을 파악한 이후 오늘 장관께서 죽 보고한 정부의 대응을 읽었는데 대내적인 거지요, 2시간 동안의 것을 보면 일본보다 항상 한발이 늦었고 1·2·3차 핵실험 때와 똑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 덜 직접적인 관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상 보면 빠르게 움직였고 빠른 조치를 했고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어저께 NSC에서 내놓은 정부성명 요지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것을 카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대응이 늦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정보의 실패, 그리고 첩보도 수집하지 못했다는, 우리가 졌다라고 국정원장이 시인을 하고 우리가 정보에서 실패했다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에 못지않게 항상 대내적 대응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벌써 4차거든요, 그런데 1·2·3차를 카피하는 정부성명을 내놓으면서도 항상 늦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공지진 파악 이후의 대내적 대응 여기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제공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지만 항상 미국과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13시간, 14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북쪽 공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압박외교인데요, 대개 압박외교 항상 하는 얘기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1·2·3차 똑같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몇 개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4개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많습니다. 핵심결의가 4개 있습니다. 핵실험이 3개 있고 미사일이 하나 있고 4개가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대북제재가 있는데 제가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가 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대북제재가 조금이라도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질문을 한 기억이 있고요. 그때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북제재의 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북제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이 얘기도 맨날 나온 얘기 아닙니까?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얘기는 2006년이 1차였지요, 9년 동안 들어온 얘기입니다. 9년 동안 들어온 얘기를 똑같은 레코드 또 틀어 놓고 2016년 초에 국민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사반세기 동안에 핵물질과 핵실험과 여러 가지에서 달라진 것을 저희들이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이것이 수소폭탄인지 아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영원히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힘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이런저런 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이번에도 또 결여된 채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차 핵실험은 HEU에 의한 거였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적으로 어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정부의 대응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진파가 탐지되는 즉시, 특히 외교부로서는 10시 40분부터 제가 주재한 대책회의를 열고 또 청와대와 긴급교신을 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다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NSC 회의 자체는 12시에 개최되고 이어서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과거에 대개 한 두세 차례 정도 긴급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10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전례 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민 위원** HEU 부분은 국정원 보고에서는 3차 핵실험은 분명 HEU에 의한 핵실험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지금 평가가 다른데 외교부 평가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저희가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다만 국제사회 일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적인 판단을 못 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5시56분)

**○위원장 나경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야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결의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마련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대안을 추가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대안)**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하여 결의안을 시의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야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간사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고 남아 있는 극소수의 쟁점에 대한 합의는 여야 지도부의 협상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실정인데 더 이상 지도부의 논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간격이 많이 좁혀진 만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와 중지를 모아 북한인권법안을 타결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협의 경과를 보더라도 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한 바 있고 또한 당시 의결한 북한인권법안에 비하여 현재의 중재안에 야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우리 위원회에서 타결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북한인권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제사회에도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채택한 결의안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북핵 불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만 결의안 체계 및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님들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계속)

**가. 외교부**

**나. 통일부**

(16시01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외교부장관님, 방금 우리 외통위가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한 것이지만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계속해서 개발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규탄결의안, 촉구결의안에 머무르면서 국제사회 공조,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그 효력이 크지 않음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취약하게 방치해 둬서 되는지에 대해서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아마 우리 정부의 임기와 거의 같이 하실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만큼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의 역사 속에 큰 획을 긋고 계신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위안부 협상과 같은 협상가로서의 면모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핵개발이 시작이 되고 벌써 이제는 조금 있으면 30년이 다 되어 가는 만성적인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 과연 이렇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장관님의 기본 인식을 한번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저희 외교부는 대외관계를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의 기본 인식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특히 핵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저희 자체의 방위능력, 억지능력도 중요합니다마는 한미 동맹에 의한 방위능력과 억지능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또 도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중국·러시아를 포함해서 6자회담 당사국, 또 국제사회 모든 주요 행위자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화에서도 보셨듯이 오바마 대통령도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앞으로 유엔 안보리라든가 여러 가지 무대에서 저희 입장을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번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金世淵 委員** 오늘 어느 신문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보셨겠지만 60년대 초에 프랑스가 핵개발을 시작할 때 미국이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똑같이 지금 우리 상황에 대입시켜 본다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 한미 정상 간에 수없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런 안보문제에 관해서, 특히 미국에 대한 지원 의사에 관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다, 그것은 지난 10월 달에 한미 정상 간에도 합의된 얘기기도 하고 또 국방장관 간에, 또 저를 포함해서 2 플러스 외교·국방장관 간의 합의문에도 그러한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북한 문제가 한국에만 미치는 위협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포함한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중국하고의 관계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도 지금 이미 무력화되어

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즉 북핵문제를 동북아의 주요 당사국들이 함께 관여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6자회담이 실제로는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1·2·3차 핵실험 이후에 있었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북한의 에너지나 식량의 생명선 역할을 중국이 계속하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에너지나 식량 면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마 생존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도발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들어야 그래야 행동을 바꾸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공급을 해 주면 행동을 바꿀 아무런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생존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은 주로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아주 미미한 수준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지난 4차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 열심히 동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강한 규탄성명뿐만 아니라 나름대로는 국내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달러를 포함한 외화 부족으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재가 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世淵 委員** 지금 미국의 대선 국면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격차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그리고 독일까지도 거론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기여만 하고 미국의 각종 제품들을 팔아서 이익을 다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아주 포퓰리즘적인 선동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특히 공화당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계속 이런 선동발언을 할 경우에, 마치 일본의 극우파들이 여러 가지 한일관계를 아주 소수집단이 다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지난 10년, 20년간 상황을 몰고 왔듯이 미국도 자체 재정여력이 지금 계속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동이 점점 더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우리 안보체제, 즉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 위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저도 장관님과 인식이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우리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약소국으로 폄하해서 볼 여지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스스로 전략적인 카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 자체를, 기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것을 급격한 변동을 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현상의 변경, 즉 대북압박 수단을 대한민국 스스로 만들어 내겠다는 국가 생존 의지를 우리가 가다듬어서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4차 핵실험 했지요? 이제 5차·6차 돼서 실제로 수소탄이 완성되었다, 미사일이 더 정교하게, 탄두는 소형화되고 운반능력은 더 커지고 이래서 막을 수 없는 단계로 이미 들어서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북한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수소탄에 대한 첫 언급 이후에 나왔던 우리 정보당국의 인식이라든지 또 이번에 예측을 제대로 못했던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곤란하겠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헨리 키신저와 같은 세계적인 외교의 대가가 지금 한국에서 외교정책을 편다면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 하는 협상가뿐만 아니라 전략가의 자리에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지금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항상 외교관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큰 그림도 보면서 또 작은 그림도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점을 제가 잘 유념하고.

특히 지난 10월 달에 한미 정상 간에 한반도에 관한 특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마는 그때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를 두고 시급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의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보다 이 문제를 종합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하는 그런 논의와 또 다양한 대책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世淵 委員**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북핵 요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100% 방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북핵을 상쇄할 수 있는,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서 지금까지의 태도보다 진전된 태도를 미국, 특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하는 이런 수단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위원**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실험한 게 수소탄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수소탄이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사실은 정확히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 주요국의 정보기관, 또 CTBTO, 이런 다양한 단체들까지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가 되는 분석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심윤조 위원** CTBTO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은 어젯밤에 특별 브리핑을 해서 과거 3차 핵실험 때와 유사한 폭발력과 지진파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마는……

**○심윤조 위원** 그것은 수소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까지 CTBTO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각국에서 종합적인 인텔리전스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CTBTO의 하나의 사실적인 판단은 참고가 됩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수소탄이건 아니건 간에 보면 북한이 소형화·경량화에는 점차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갱도가 작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 봐서. 그리고 이번에도 수폭이라든지 하는 실험을 주장하면서도 상당히 작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면밀히 보면 시험용 수소탄이라든지 그런 제한적인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소탄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소형화·경량화를 상당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의 그러한 기술 수준에 대한 정부 평가는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 스스로도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등을 다 달성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최초로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동안의 북한 핵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소형화·경량화에 나름대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분석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리고 가스가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래 가지고 일본이 그것을 열심히 수집한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한일 간에 이러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보 공유는 지금 충실히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지난번에 한미일 간에 그런 MOU를 체결한 것도 있고 또 한미 간에, 미일 간에 이런 공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보 공유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한일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

각별히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수시로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많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리고 이번 상황을 보더라도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이 이미 휴지조각화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그냥 필요하면 그것도 가끔 인용하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한다, 그것은 이미 무효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이 그것을 사실상 어기고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많이 훼손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또 그런 것들이 통일 이후에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윤조 위원** 우리도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수소탄이면 북핵문제의 근본적 성격이 바뀐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계속,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우리를 구속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요.

그리고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께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핵무장론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으로서 또는 정부의 각료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우리의 옵션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에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도 저희를 가장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특히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십니다마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고, 또 유엔 총회에서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협에 걸맞은 그런 대응은 필요합니다마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저희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윤조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옵션은 다 우리 테이블 위에 있다, 어떤 것을 끄집어 쓸지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팔과 다리에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핵화 선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입장으로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BDA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가 상당히, 한 1년 반 동안 지속됐는데 그것이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그러한 조치였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무모한 수를 둔 것인데 지금 그와 같은 강력한 형태의 금융제재 이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점에서 국제적인 안보리 제재도 필요하지만 특히 미국의 아주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4차 핵실험까지 이르게 된 상황하에서 앞으로 취하게 될 국제사회에서의 조치는 그것이 다자적이든 양자적이든 더 독자적인 조치든 간에 좀 더 엄중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하고도 협의가 있

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제가 BDA를 말씀드린 게 유엔의 제재가 되건 무슨 국제적인 제재가 되면 결국 중국이 관건인데 중국은 지금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중국은 제재에 처음엔 동참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제재를 계속할지 안 할지, 사실 여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중국의 이 지역의 대외정책을 볼 때 끝까지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와 보조를 맞추면서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미국이고 미국이 강력한 금융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돈줄을 죌 수 있고 이것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때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의 내부적인 조치로는 지난번 8·25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대북 확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북방송을 포함한 역시 심리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8·25 합의가 이미 북한에 의해서 비정상적 상황이 됨으로써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우리가 좀 더 프리 핸들을 갖고 다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는 북핵문제라는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북 확성기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대미문의 권력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핵개발 또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이지요? 2차가 2009년 또 3차가 2013년, 올해 2016년, 3·6·9, 3·6·9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현상을 보는데 저희가 매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1718호 또 2009년도에 1874호 또 3차 핵실험 이후 2013년도에는 2094 결의안을 계속해서 채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의안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북한이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달러를 포함한 경화 부족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 세계에 많은 대표단이 나가서 경제협력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은 다 결국은 유엔 제재라든가 서방의 제재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이루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외통위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하는 문제가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에 대해서 한중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북 수출품 반입 금지품목을 정해 놓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왜 북한이 매년 수입하는 사치품의 규모가 늘어납니까? 증가합니까?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3년 동안의 사치품, 3년 동안의 규모가 13억 50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3년 동안의 사치품 수입이 20억 9000만 달러입니다. 2014년도에 북한의 사치품 수입규모가 얼마냐, 8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8억 달러. 아버지 시대 때 4억 달러였습니다. 더블이 넘어갔습니다, 더블.

그러면 한 해 북한이 수입하는 총 수입액이 얼마냐, 2014년도 44억 달러입니다. 44억 달러 중에 8억 달러 이상을 사치품 수입에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 이상을 사치품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치품 수입하면서 결국 당료들, 고위 군

간부들 나눠주고 있지요. 선물통치를 하고 있지요. 돈을 펑펑 씁니다.

핵개발하는 데 돈, 이번에 수소탄 실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핵융합증폭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수소탄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수소탄? 아까 김영우 위원이 지난 3차 핵실험 때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수소탄의 초기단계에 진입하려고 하는 단계로 보이는데, 그러면 8조 원이라는 돈 어디서 북한이 만드느냐. 그리고 선물통치 한다고 이렇게 사치품을 내다 쓰는 나라, 결국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첫째, 이번 기회를, 확실히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핵무장,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성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결국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 때문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외교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중국 너희가 유엔에다가 대북 수출품 반입 금지품목을 정해서 빨리 그걸 시행하라라고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외교부의 보호조치사항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세컨더리 보이콧은 국가별로 과거에도 취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안보리 결의가 취해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해당되는 국가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간사와 사회교대)

**○윤상현 위원**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서, 얘네들이 정말로 수소탄 실험으로까지 가려면 8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 돈을, 핵개발에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김정은의 비자금에서 나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이 40억~5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차단방식으로 해서 김정은의 통치자금, 비자금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줄 봉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도 유엔을 통해서 또 관계국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그 두 가지를 드립니다.

좀 전에 핵무장 얘기가 나옵니다, 핵무장.

저는 심정적인 분노와 냉정한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 하자, 시원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책임 있는 고민이 담겨있는가, 정말 우리가 NPT체제, 국제질서를 지키는 체제하에서 우리는 엄연히 폐쇄된 북한과는 다르다, 우리는 개방된 한국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NPT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고립화의 길로 들어선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핵무장은 아니다, 정말로 핵무장을 한다면 비밀리에 통치권자의 결심으로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공개적으로 핵무장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것은 무기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핵무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제나 외교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결국 그게 바로 우리 안보의 위기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무장 이것은 정말로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할 생각입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국에 대해서 그 조치……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것도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긴밀히 해 주셔서 이번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대리 심윤조**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새해를 맞이해서 두 분 장관님 또 두 부처 간부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께서 외교부장관께 수소탄 실험에 대한 평가를 물으셨는데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

다.

'첫 수소탄 실험이고 성공적이다'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수소탄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게 수소폭탄이든 그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이든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이번도 그것의 한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이미 핵융합실험에 북한이 성공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 기억에 아마 2010년인가 한 번 그런 일을 북한이……

**○원혜영 위원** 10년 5월에 핵융합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미증유의 안보위기가 올 거다'는 우려와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달여 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우리 조국은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시를 해 왔고요. 2010년이나 그 이후에도 북한이 자신들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과시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기관 또 해외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융합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은 있었다라고 봅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대외적으로 표명한 통일부의 입장은 뭐였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수소탄에, 김정은이 얘기했을 때도 어쨌든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것은 추가적인 확인이, 당시에 북한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 '발언의 형식과 시점을 볼 때 블러핑(bluffing)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게 불과 한 달 전이거든요. 김정은이 직접 우리는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블러핑처럼 보인다' 그게 한 달 전 얘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리고……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게 수소폭탄이든 증폭핵분열탄이든 간에 이런 위기가 왔고 이건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예고됐던 거고 김정은이 불과 한 달 전에 직접 언급한 건데도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번에 화들짝 놀라게 된 것은 어쨌든 뭔가 우리가 이 과정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큰 소홀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하는 계기로는 삼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그런 임박징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은밀하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아마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12월 10일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대변인이 블러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기술력이나 또 이번에 그런 폭발을 우리가 청취한 여러 가지 폭파범위를 봤을 때 수소폭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도 그런 취지를 기자들한테 표현하는 과정에서 블러핑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입장은 같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원혜영 위원** 통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 정부 전체나 통일부에서 좀 안일했다, 부족했다 이런 자기평가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하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 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쨌든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정보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위원** 북한 핵개발 역사가 20년이 지났

습니다. 1차 핵실험한 때부터 따져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미국·중국·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1세대 핵분열탄에서 1.5세대 증폭핵분열탄을 거쳐서 핵융합기술을 활용한 2세대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데 걸린 기간이 평균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게 5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의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재네들이 블러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무책임하게 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통일부장관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각성이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구호뿐인 대북정책, 구경꾼 북핵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입장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또 천명하고, 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을 짜는 데 우리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앞장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한길 위원께서 소녀상 이전 철거를 시도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뚜렷한 대답을 못 하신 것처럼 보이네요. 합의 내용을 보면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소녀상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협의를 관련단체와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방점은 그냥 협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원혜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대화하고 또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해야 되겠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합의문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아까 김한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이 알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 눈높이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관련단체에 대해서 '이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하고 대화하고 설득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협의는 어떤 시점이 될 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원혜영 위원** 지금 당장 협의할 생각은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원혜영 위원** 당장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했다는 게 하나의 방점이고요……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당장 협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원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무슨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윤조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혜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짚고 갑시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내용에 대해서 관련단체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떤 문제지요?

**○원혜영 위원** 일본과의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일본과 합의하겠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 제가 모두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담당국장이 서울과 지방에 있는 여러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단체들과 한 15일 정도 접촉이나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한 적이 있고요.

**○원혜영 위원** 대충 이렇게 골격이 잡힌 상태에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원혜영 위원** 피해자 할머니들께 '우리가 이런 윤곽으로 합의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최종 단계에서, 마지막에

타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피해자 할머니 당사자들한테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의 큰 윤곽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 가지고 '합의했으니까 소녀상 이전해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할머니들 입장 또는 대표단체 입장을 저희가 대체로 잘 알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거 2014년에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국제회의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핵심 사안을 왼쪽에 정리해 봤는데 왼쪽에 보면 책임 인정, 두 번째가 공식적인 사죄, 세 번째가 일본 정부에 의한 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합의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런 요소를 거의 다 반영을 상당히 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했고 또 공식적·공개적인 사죄·반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하던 일본 정부에 의한 예산 출연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이 나름대로 그동안 할머니나 할머니를 지원해 주는 단체들의 요구를 상당한 정도는 반영을 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설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관계되는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더욱더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보충질의 김세연 위원님 한 분이시니까 좀 양해해 주시지요.

1분 더 하시지요.

**○원혜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협의한다고 해 놓고 결국 협의가 안 되면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소녀상 문제는 합의문에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녀상의 민감성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아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문안이 나왔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밀어붙일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이 문안에 나온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병국 위원** 예.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정병국 위원님과 김세연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2차·3차 핵실험 때도 유엔 결의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우리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자기들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을 썼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 간에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정부하에서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대로 핵개발을 자기들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도 유엔의 제재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력한 조치든 간에 그냥 만성화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주사를 줘도 안 낫는 것 같은, 듣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핵문제에 대

해서, 특히 대북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의 관계 이 문제는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가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핵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난제 중의 난제였던 한일 간의 문제, 그것 상당한 진일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누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또 저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외교에서는 100% 우리만의 의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십분 이해를 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보면 저는 상당한 진일보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을 때, 협상을 하고 실무적 접촉을 하고 했을 때 아마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 당사자들이시다, 피해자 당사자들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만들고 좋은 협상안을 가지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당사자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과 우리 국론 분열,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얘기를 몇 차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피해당사자분들께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지금 저렇게까지 나오실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당장 언론에 보도되는 일성들을 보면 '언제 우리하고 한마디 의논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결국 그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고충 이해해요. 그리고 그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협상하는 데 여러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저는 십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 안 돼요.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애를 써서 이만큼 진일보해 놓고 그분들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설득을 해내지 못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된 거냐? 불가역적이라는 것으로 해서 모든 덤터기는 정부가 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정부가 해결됐다라고 해도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정부 임의로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표현하기 거북한 표현으로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거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셨던 부분들은 이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결과물을 내드리고 그분들의 통한을 풀어드리고 그러고자 했던 것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고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다라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결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저희가 작년에 열다섯 번 했던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할머니들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위안부 협상의 시급성을 염두에 두면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아베 총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정병국 위원** 장관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진일보했는데 문제는 할머니들이 연로하시고 시급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할머니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앞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할머니가 원하는……

**○정병국 위원** 그 당사자들이 마음의 상처가 해소 안 되고 또 그분들이 존엄을 지켰다라고 안 보는 게 문제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정

부의 입장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겸허하게 계속 할머니분들 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해서 교감을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경원**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委員** 외교부장관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베 총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육성으로 낭독하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외상의 입을 빌려서 총리 입장을,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를 했고 그리고 사인 간의 통화가 아닌 국가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 입으로,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우리 대통령께 그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협상 과정을 보자면 아마 아베 총리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끌어낸 데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는 것이지요. 방금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외협상에서는 외교부가 이런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주 본질적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일이 더 꼬여 버린 결과가 된 것은 대외협상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소통 노력이 지나치게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몇 번의 접촉·방문 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안 그러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이 되어서는 우리가 어렵게 협상을 해 놓고는 정말 결과가 기대하고는 너무 달라지게 나오게 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자면 정부 배상책임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 또 할머니들을 대리해서 활동해 오신 단체에서 일본에 정부 배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즉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책임이 있다, 강제동원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배상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일본 정부 예산의 직접 출연형태로 이전의 민간기금과는 다른 형태를 분명히 띤 것은 진전이었지만 우리가 배상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바란 것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협상의 패키지 안에, 이미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때가 늦었지만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께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1엔이라도 일본 정부의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부 책임이었다' 하는 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다 지난 일이라서 좀 때늦었지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아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 출연을 해서 또 국민 성금모금을 해서 서울시내 아주 요충지, 접근이 너무나도 쉬워서 서울에 관광하러 들르는 외국인들이 거의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르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숙연하고 경건한 참회와 위로의 뜻을 담은 기념관이 서울시내 아주 요충지에, 찾아가기 어려운 데보다는 가능하면, 지금 소녀상의 위치이전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위치에 가까운 곳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사업을 제대로 구상하고, 이 부분은 정부가 외교협상의 문제에서는 어떤 보안의 불가피함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향후 기념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짧게 핵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려면 NSC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며칠 있다가 하면 그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엄중히 고려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대북 확성기는 물리적인 청취거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우리 방송의 출력을 높여서, 동·서독 통합 이전에 이런 방송교류가 있었듯이, 물론 이것이 합의에 의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상호 호혜적으로 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방송 출력을 높이는 방안도 NSC 논의 과정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북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서 늘 말로써 '북핵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이렇게 레토릭(rhetoric)만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정부의 이런 레토릭 때문에 국민들은 북핵에 대해서 좀 불감증이 생겼고 또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핵능력이 사실상 매우 고도화되어서 어제 수소탄 핵실험을 발표하는 데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 틀에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6자회담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앞에 내세우고 북한을 한 번도 테이블에 앉히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략적 인내 이야기하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중국판 전략적 인내를 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6자회담이 지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틀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장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6자회담이 8년 째 계속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은 좌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주최국으로서 여전히 6자회담에 대해서 강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6자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진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6자회담이 그동안에 남긴 9·19 공동성명의 의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러 가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6자회담을 하지 말자라든가 필요 없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그런 큰 방향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은 한번 다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다만 하여튼 우리가 당사자로서 좀 더 적극적인, 더 창의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왜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이렇게 입장을 들어 보면 과연 북핵문제에 대해서 주변국이 컨센서스를 갖고 있느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다른 이야기 하고 미국과 일본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6자회담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겠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다 좀 창의적이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CSIS 존 햄리 소장하고 한 1시간 정도 워싱턴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6자회담에서 한국이 결국 다른 나라가 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6자회담의 틀이 사실상 조금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2+4로 남북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것을 풀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북핵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이상 누가 해 주겠거니 하는 태도로는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는 하되 결국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역시 중요한데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30개국이 관련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북핵문제에 대해서 온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도 이란 핵문제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미국도 끌어내고 중국도 끌어내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단단히 고삐를 죄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요란한 대북 결의안 하고 또 레토릭으로 중대한 제재를 하겠다, 이러한 고강도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레토릭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해서 6자회담을 재검토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을 외교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되면서, 이게 북한과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미치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의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이걸 한번 모멘텀으로 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면서 말씀하신 발언에 또 그러한 저희의 단호한 의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통령께서 단적으로 반영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그래서 6자회담 틀에 대한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두 분 다 NSC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부분도 이제 핵우산 아래에서의 우리의 대응 원칙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북핵 해결과 남북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을 적극 활용하셔서 북핵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17인)**

| | | | |
|---|---|---|---|
| 강창희 | 김성곤 | 김세연 | 김영우 |
| 김태호 | 김한길 | 나경원 | 신경민 |
| 심윤조 | 심재권 | 원유철 | 원혜영 |
| 윤상현 | 이재오 | 이주영 | 정병국 |
| 정세균 | | |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이종후 |
| 전문위원 | 배용근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 | |
|---|---|
| 장관 | 윤병세 |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황준국 |
| 기획조정실장 | 김형진 |
| 다자외교조정관 | 신동익 |
| 동북아시아국장 | 이상덕 |
| 북미국장 | 신재현 |
| 아프리카중동국장 | 권희석 |
| 국제기구국장 | 유대종 |
| 국제법률국장 | 김인철 |
| 재외동포영사국장 | 이명렬 |
| 북핵외교기획단장 | 김건 |

통일부

| | |
|---|---|
| 장관 | 홍용표 |
| 기획조정실장 | 최보선 |
| 통일정책실장 | 천해성 |
| 정세분석국장 | 임병철 |
| 교류협력국장 | 김남중 |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 이상민 |
| 남북회담본부장 | 김기웅 |

**【보고사항】**

**○의원 퇴직**

| 의원명 | 선거구 | 교섭단체 | 사유 | 연월일 |
|---|---|---|---|---|
| 박상은 |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군 | 새누리당 | 대법원 형확정 판결 | 2015. 12. 24 |

○**의안 회부**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홍철호·윤후덕·송영근·정미경·이노근·이우현·유의동·박덕흠·손인춘·이학재 의원 발의)

12월 1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15. 12.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12월 21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2015. 12. 30 김제남·심상정·정진후·서기호·박원석·정성호·홍영표·장하나·노영민·백재현·정청래·심재권·김기준·전정희 의원 발의)

12월 31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 12. 31 유승희·이종걸 의원 외 117인 발의)

2016년 1월 4일 회부됨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016. 1. 7 심재권·이종걸 의원 외 116인 발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016. 1. 7 원유철·심윤조 의원 외 154인 발의)

이상 2건 1월 7일 회부됨

○**관련 의안 회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1 신경림·박윤옥·안홍준·최동익·김관영·이명수·이학재·정미경·장정은·정성호·김춘진 의원 발의)

2016년 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통지**

**국회의원 궐원에 대한 통지**

2015. 12. 28 의장으로부터 박상은 의원이 궐원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